

[초청강연]

문재인정부의 물정책 패러다임 전환과 전망

김좌관

부산가톨릭대학교 환경공학과

1991년 발생한 낙동강 폐놀 오염사고 등으로 인해 1994년 건설부의 상·하수도 기능이 환경부로 일부 이관된 이후에도 물관리는 큰 틀에서 국토부가 수량관리를, 환경부가 수질관리를 각각 맡아왔고, 농업용수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소하천은 행안부 및 지자체가 관리해 오고 있다. 특히 물관리체계의 일원화 요구(환경부와 국토부간의 일원화 방안)는 참여정부 말기에 추진되다가 좌초된 바가 있다. 개발시대에 필요한 많은 수자원 확보를 위한 댐 건설방안은 최근들어 많은 민원과 부작용을 야기시키고 있는 실정이고 또한 기 확보된 수자원의 질적 저하와 효율적인 수자원의 관리 대책이 상대적으로 더욱 더 절실한 시대적 요청이 있는 상황이다. 이에 물통합관리의 1단계로 국토부와 환경부의 수량·수질 통합관리가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시행되고 있다.

이번 물관리일원화 관련법의 통과로 하천관리를 제외한 수량, 수질, 재해예방 등 대부분의 물관리 기능이 환경부로 일원화되었으며,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 운영,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및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수립 근거 등이 마련됨으로써 국가·유역단위의 통합물관리 체계로 나아가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과정은 문재인 대통령후보의 ‘물하나로 정책’을 공약으로 채택함으로써 가능하게 되었고, 국토부의 수자원국, 홍수통제소, 한국수자원공사가 환경부로 이관됨으로서 일차적인 물통합관리가 시작된 셈이다.

이제는 ‘수량’에서 ‘수량과 수질’의 통합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하천’을 넘어 ‘유역관리’ 차원에서 수환경 정책을 수립해야하며, 물환경정책 결정이 일방적인 ‘top down’ 정책결정에서 지역주민의 참여하는 ‘bottom up’ 정책 과정이 필요한 시점이며, 개발시대의 ‘공급’ 우선 수자원정책에서 ‘수요’관리를 통한 수자원의 효율적 관리 측면이 강조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 이번의 수량수질 통합정책이 안착되고 나면, 농업용수, 소하천, 발전용 댐 관리도 향후 효율적인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국가물관리체계가 일원화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